韓国経済新聞　2019年7月6日朝刊

[寄稿] 韓・日、文化的差を理解することにより葛藤解消必要

-相手の'約束' 文化を尊重し、過去史とは別途に協力増進を-

李　秀澈< 日・名城大学経済学部教授 >

一番近い近隣国である日本との関係は、薄氷の上を歩くような不安の連続である。かつて韓流ブームによりやっと日韓が安定的な関係に入ったかと思えば、慰安婦問題が足を引っ張り、パク・グネ政府の時、慰安婦問題に対してやっと合意に至ったかと思えば、今度は徴用工問題が足を引っ張っている。もちろんこうした問題の根源は日本が韓国を殖民支配した不幸な歴史に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ただし、複雑な支配と被支配の歴史を繰り返したヨーロッパでは、今日に至っては共同体を形成して緊密なパートナー関係を作っている。ところで韓国と日本は、終戦後74年も経ったのに未だ相互不信の関係が続いていることはなぜだろう。これは被害者と加害者と言うお互いに違うアングルから見る視覚の差が大きいと言えるが、‘約束’に対する文化的な差も一役していないかと思う。

日本と韓国は同じ儒教文化圏であり、顔付や服装も似ているので文化的差があまりないようにみえるが、生活深く入って行けば意外のところで相違点が少なくない。なかでも一つが約束に対する文化的差である。韓国で約束をするということは ‘他の特別な事情がなければ’と言う無言の前提が入っているようである。すなわち、約束を守りにくい突発的な状況とか、その約束よりもっと重要な他の事情が起これば‘今度は約束を守りにくい’と相手を説得することができる文化である。これに比べて日本で約束をするということは ‘人力で統制不可能な天災地変ではない限り’と言う前提が敷かれている。くだらない約束だとしても先約が優先で、他のいくら重要な事情が起きても約束を破る人とは信頼関係を作ることが難しい文化である。

 徴用工問題を見る視点もそうである。日本は、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で5億ドルを賠償したし、その時にすべての請求権を抹消することに約束したのだが、これを守らない韓国とは正常な国家関係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立場である。一方、韓国は当時とは事情が大きく変わったし、その時被害を受けた個人の人権については加害者である日本が酌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である。約束に対するこのような相互の文化的差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く、相互不信の谷が深まり、やがては日本が経済的仕返しカードまで取り出すようになっている。

熾烈なグローバル競争の下でお互いに助けなければならない近隣同士で経済戦争まで起こし ‘共倒れ’となることは絶対あってはいけない。日本は長年の植民地支配の下にあった問題を約束一つでなかったのようにするのではなく、その時代人権を侵害された人々に当事者である日本が慰めと謝りの言葉で一歩韓国に近寄る必要がある。そして韓国は日本の約束文化を理解・尊重し、韓・日協定の恩恵を受けた企業らが率先して賠償に参加することで日本に一歩近寄る必要がある。

経済的でも離れることのできない大事なパートナーである日本とは、過去の歴史とは別個で、相互協力して助け合う発展的関係を作っ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政治家たちが韓・日関係を政治的に利用していると憤慨し、非難ばかりしても問題を解決するどころか悪化させるだけである。政治的問題とは別途で、相手の文化を理解して尊重する時、信頼できるパートナー関係が形成されるであろう。

＊参考：新聞記事は原文を若干編集したところがありますが、翻訳は原文を生かしました。

**[기고] 韓·日, 문화적 간극 좁혀 갈등관리 해야**

**약속' 관련 상대방 문화를 존중
과거사와 별개로 협력 증진해야

이수철 < 日 메이조대 경제학부 교수 >**

![[기고] 韓·日, 문화적 간극 좁혀 갈등관리 해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불안의 연속이다. 한류 붐으로 인해 안정적인 관계로 들어섰나 싶으면 위안부 문제가 발목을 잡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나 싶으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불행한 과거사에 있다.

복잡한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를 지닌 유럽은 오늘날 공동체를 형성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해방 후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호불신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피해자와 가해자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의 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약속’을 대하는 문화적인 차이도 한몫하지 않나 싶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이고 생김새도 비슷해 겉으로는 문화적 차이가 별로 없는 듯하다. 하지만 생활 깊숙이 들어가면 다른 점이 적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다. 그중 하나가 약속을 둘러싼 문화적 차이다.

한국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이란 무언의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즉,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다른 사정이 생기면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문화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인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닌 한’이란 전제가 깔려있다. 시시한 약속이더라도 선약이 우선이고, 다른 아무리 중요한 사정이 생겨도 약속을 깨는 사람과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문화다.

강제징용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 일본은 일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5억달러를 배상했고, 이로써 모든 청구권을 말소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저버리는 한국과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당시 상황과는 사정이 달라졌으며 그때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상처를 가해자인 일본이 반드시 헤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속에 대한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이제는 일본이 경제적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게 된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하에서 서로 도와야 할 이웃끼리 불신하고 경제전쟁까지 일으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은 오랜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문제를 약속 하나로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진정 어린 위로와 사과를 하며 한걸음 한국에 다가서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약속문화를 이해하고 한·일 협정의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솔선해서 배상에 참여함으로써 일본에 한걸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과는 과거사와는 별개로 상호 협력하고 돕는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만 이를 비난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는 법이다.